

대북특사 파견 공식화... 초대 특사로 서훈 0순위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하면서 누구를 초대 대북특사로 낙점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대 대북특사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동시에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함께 요구받고 있어 문 대통령이 마땅한 인물을 놓고 최종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운영한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로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식에 맞춰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제1부부장은 당시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답방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대북특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남북정상회담 조율이다.

북미대화 탐색국면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라인 가동 전방위적으로 힘 써와... 임종석·조명준도 후보군에 올라

공식기구를 통해서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문 대통령의 원칙에 비추었을 때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북특사로 다녀오면서 성사됐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정상회담 기본 원칙은 국정원·통일부 등 대북 관련 공식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쫓아온 문 대통령의 인식은 지금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접견 자리에서 원장과 조명준 통일부장관 등을 배석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서 원장과 조 장관을 가리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 북을 자주 방

문했던 분"이라며 "제가 이 두 분을 모신 것만 봐도 남북관계를 빠르고 활발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 원장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2차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때도 김영철 부장과 비공개 만찬에 이어 이튿날 공개 조찬까지 참석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물밑 접촉을 활발히 벌인 바 있다.

특히 서 원장은 최근 북미대화 탐색국면에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라인을 가동하며 전방위적으로 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대북특사의 임무를 고려할 때 서 원장에 비급가는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대북특사 경험에 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 김여준의 뉴스공

장'에 출연해 서 원장이 대북특사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전에 만난 사람이나 아니냐' 낮을 가리는데, 서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라며 "대북특사는 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인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비춰도 제일 적임자"라고 분석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 서 원장의 경우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물밑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특사로 여동생인 김여정 1부부장을 보낸만큼 무게감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 역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야 한다는 주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운명'에서 "백종현 안보실장

과 김만복 원장은 북한에서의 답신이 있을 경우 내가 특사로 가야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나는 상황을 보고 순리에 맡기는 게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회고한다.

이외에도 조명준 통일부 장관이 특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식 대북특사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낙점됐다는 점과 대북업무에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통일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다.

북미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가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들 3인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주사파에서 전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현송월의 공연에 눈물을 흘렸고 김영철도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조명준 장관, 친북 대화 놀이에 푹 빠져 있는 서훈 국정원장"이라고 지적한 뒤 "이들이 나갔다면 북한의 위장 평화 논리에 훌쩍 녹아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남원 용성고 기숙사 신축 예산 16억3700만원 확보

무소속 이용호 의원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난항을 겪던 남원 용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이 국가예산 확보로 본격 추진된다. 이로써 남원 관내 모든 학교들에 기숙사 시설이 갖춰질 전망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일 용성고 기숙사 신축 총 사업비 16억 3,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용성고는 로봇산업 분야 특성 학교인데도 기숙사가 없어 집중도가 어렵고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 관내 면단위 교통 불편 학생이나 인접 시·군 중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해 신입생 충원율이 5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훈련 후 늦은 시간 귀가해야 하는 학생과 10km 이상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통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컸다.

기숙사가 신축되면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돼 학생들의 복지와 안전이 증진되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장거리 산간지역 거주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용호 의원은 "용성고는 남원 관내 7개 고교 중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었는데, 신축예산을 확보해 묵은 숙제를 해결한 심정"이라며, "이제 모든 고교에 기숙사 시설이 완비됨에 따라 남원이 전북 동부산간지역에서 교육 중심도시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여비하 논란 탁현민 "나갈때 해명"

한 차례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여기 있는 동안은 일선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탁 행정관은 청와대 입성 직후인 지난해 5월 과거 자신의 저서 내용으로 인해 한 차례 여성 비하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뉴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자신의 거취 논란이 재차 불거지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탁 행정관은 청와대 입성 직후인 지난해 5월 과거 자신의 저서 내용으로 인해 한 차례 여성 비하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뉴스

민중평화당이 5일 당 워크숍에서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과의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윤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당내 논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고창군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펼쳐졌다. 사진은 성화체화 행사.

평창 패럴림픽 성화, 고창서 불 밝히다

시가행진·성공기원 행사 등 군, 3일까지 이틀간 성화봉송

고창군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펼쳐졌다. 성화봉송은 '제37회 고창 오거리당 산제'와 연계해 고창군 중앙당산과 고창읍성 광장, 고인돌유적지 등 고창군 일원에서 진행됐다.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화는 전국 5개 권역 시·군(전라도 고창군, 경기도 안양시, 충청도 논산시, 경상도 청도군, 제주도 제주시)에서 체화됐으며 3일 각 시·군 내 봉송로 이동한 희망의 불꽃이 서울 올림픽공원원에서 합화한 후 대회 개최일인 9일 개최식이 열리는 평창에 도착한다.

고창군에서는 2일 정오 중앙당산에서 성화체화 후 고창읍성 앞 모양교 ~고창군청~터미널~전통시장~중앙당산까지 약 3km의 시가행진이 진

행했다. 이날 성화체화 행사 중 중앙당산과 고창읍성 광장에서는 고창오거리당산제와 연계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이 열렸다.

성공 기원 행사는 송하진 도지사와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 고석원 위원장,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행사와 함께 하이лай트로 소망기원 달빛태우기 행사가 열려 패럴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군민들의 열원과 희망이 담긴 성화의 불꽃이 뜨겁게 타올랐으며 오거리 당산놀이인 연등놀이, 대동놀이와 당산 율타치까지 풍성한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3일 진행된 성화봉송은 고창군청에서 시작해 고창읍중, 고창경찰서, 터미널 사거리, 제일아파트 등 고창읍 시가지지를 거쳐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4.8km구간을 48명의 주자가 참여하고 이색봉송으로 고인돌 유적

지에서 모로모로 열차를 이용하여 봉송행사가 진행됐다.

고창군에서는 박우정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의장, 올림픽 메달리스트 홍성식씨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꿈과 열정을 펼치고 지역사회에 헌신과 봉사로 귀감이 되어 온 이연호, 서경찬, 정종만, 최선례, 배금옥씨 등 고창군민 8명이 봉송주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우정 군수는 "한국인의 분향, 고창군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화 봉송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은 패럴림픽 대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올림픽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성화봉송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안전하게 이뤄졌다"며 "6만 고창군민들의 열정과 열원이 모든 선수들에게 전해져 오랜 기간 준비해온 역량을 아낌없이 펼치고 장애를 넘어 모두가 평화와 희망,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공적인 패럴림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평당,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 결정

민중평화당이 5일 당 워크숍에서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과의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윤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당내 논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결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내에 (공동 교섭단체 구성 관련) 소위원회 구성했는데 제가 위원장을 맡았다"며 "원외위원장 등 당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끌지 않기 위해 곧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과

정에서 무소속 선언을 한 이용호 의원과 손금주 의원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용호 의원은) 저희가 추진하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는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고 손금주 의원도 같은 뜻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민중평화당) 입당 여부에 대해선 지지여부이나 지지자들과의 논의는 두고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No'

도, 전주대 등 6개 대학에 이동상담센터 운영 공정위 등 기관과 연대 피해예방 교육 등 실시

전북도는 최근 대학교 입학시즌을 맞아 강의실 등에서 방문판매사원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어학 등 교육서비스 과정을 홍보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비자에게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형태의 방문판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일 전주대학교를 시작으로 전북 6개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상담센터운영은 사전 피해예방의 일환으로 대학생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방문·전화 권유판매, 불법피라미드, 인터넷쇼핑몰 거래 등 특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피해 발생에 대비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전북도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지원 광주지원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추진한다.

앞서 지난 2월 28일 군산대, 3월 2일 전주대, 호원대 신입생Orientation를 통해 한국소비자지원 광주지원 오규호대리가 신입생들에게 불법 방문판매, 단단계 소비자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시켰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사회 적응력이나 소비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업체의 사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대부분 설문조사나 피부테스트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하거나 자격증 또는 대학교 필수 과목 교재처럼 홍보하면서 교재를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학교 선배 동문이라고 사칭하거나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하여 재를 강매하기도 하므로 대학생 신입 재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 황철호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정보접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이동상담 및 맞춤형 소비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소비자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가 현장 징수단을 발족했다.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전개

전주시, 현장 징수단 발족

전주시는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3개반 21명으로 구성된 현장 징수단(단장 부시장)을 발족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과 세외수입 2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처분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장 징수단은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최근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은닉재산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소유재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출채권 압류, 공매, 출구금지, 명

단공개 등 체납 처분으로 맞춤형 체납 징수의 틀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생계형과 고질체납자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대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당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보류하고 분담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이 감면(비과세)받은 물건을 그 목적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방세 감면(비과세) 세부조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